

“조속한 합의보다 국익 최우선… 대미 협상에 만전 기할 것”

美, 관세부와 내달 1일로 유예
위성락 실장, 미국 국무장관과 협상
조선업 협력 등 실질적 성과 도출
협상 기회확보, 시장다변화 방안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 부과 계획을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당초 이달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율은 유지하고 부과 시점만 내달 1일로 3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3주를 번 셈이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도 조속한 합의와 함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이하 한국시간) 대통령실은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한미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위 실장보다 하루 먼저 미국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실질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날 ‘대미(對美)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7월 9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오는 9일 귀국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오르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촉박했던 데 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자동차·철강업계, 수출다변화·생산확대… 정부는 협상 강화

상호관세 타격 최소화 대응책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가격 조정
철강, 원자재 공급망 재편성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는 생산 확대, 공급망 재편성, 가격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다음 달 1일이 되면 원래

대로 25%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자동차·철강업계는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성을 통해 상호관세의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설 예정이며, GM과 포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전략적 가격 조정을 통해 자동차업체들은 가격 인상과 동시에 경제적인 모델을 출시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역시 가격 인상과 함께 생산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상호관세의 영향을 상쇄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공장을 강화해 생산과 유통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국내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내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도 이번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상호관세를 기본관세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대폭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더욱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 2분기 반도체 실적 ‘어닝 쇼크’… HBM·재고 손실 악영향

대중국 제재 등 DS부문 수익성 직격탄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배경에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복합 악재가 작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가 동시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모두에서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 출하되지 않은 재고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회회성비용으로 대거 반영되며, 실적에 직격탄

이 됐다. 전략제품인 HBM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AMD 등 일부 고객사에는 출하가 시작됐지만,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거래는 아직 품질 검증(퀄테스트)을 통과하지 못해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면서 관련 재고 손실이 발생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중국 고객사 수요 둔화와 공정 전환 지연으로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을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실적에 대해 “재고 충당금과 대중국 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DS 부문

이익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선 2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하반기 HBM 출하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중심의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D램은 업황의 수급 밸런스가 안정화하면서 가격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다”며 “출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방향성이 명확해 전자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인 실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HBM 시장 진입과 수출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의 리레이팅(재평가) 요인이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해민 기자 hyem@

트럼프 관세서한에도 코스피 3100선 ‘회복’

美증시 ‘흔들’, 韓증시 타격은 제한적

코스피가 8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서한에도 3100선으로 날아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가 이미 국내 증시에 선반영됐고, 7월 기점으로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81% 상승한 3114.95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미국이 발표한 수치(25%)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듯했지만, 국내 증시 개장 직전 트

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국에 보낸 서한에 담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은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7월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닌 본격적인 해소 국면이라고 판단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으로 단기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한이 연기됐다는 점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